INSS 연구보고서 2020-14

2020 INSS Research Report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수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비매품/무료
94340
9 791189 781392
ISBN 979-11-89781-39-2
ISBN 979-11-89781-03-3(세트)

INSS 연구보고서 20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 이수석

2020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수석 lss1982@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수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20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수석

이수석(李壽碩)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려대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연구영역은 북한정치, 북한의 대외관계, 남북관계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북한, 그리고 동북아』,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전개』, 『조선노동당의 당원 통제』 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 6

I. 서론 — 8

II. 김일성·김정일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특징 — 14

1. 김일성 시대 — 15
2. 김정일 시대 — 20

III.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변화 과정과 요인 — 24

1. 대외 군사정책의 결정기구 및 과정 — 25
2. 대외환경의 변화 — 30
3. 변화 요인 — 39

IV.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유형별 특징 — 50

1. 무기거래 — 51
2. 군사인력 파견 및 훈련 — 62
3. 군사기술 교류 — 67
4. 무기마케팅 협력 — 70

V. 결론 — 76

Abstract — 82

참고문헌 — 84

국문초록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은 군사적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생존 능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시대별로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목표와 양태가 달라졌다. 김일성시대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에 군사병력과 군사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여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대외 군사협력을 전개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 아울러 군사기술력의 함양과 핵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강국의 목표도 세웠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통해 체제위기를 해소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목표를 위해 북한은 대북제재의 감시를 피하면서 비밀리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유형별 실태와 특성을 첫째, 무기거래 둘째, 군사인력 파견 및 훈련 셋째, 군사기술 교류 넷째, 북한의 무기 마케팅의 주체와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북한군사, 중동, 아프리카, 무기거래, 군사훈련

I

서론

1948년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 대외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북한이 발간한 백과사전에서는 대외정책을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1]이라고 했으며, 정치용어 사전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내정책의 연장이며 당과 국가의 대외활동의 총적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외정책 분야에서 잘 사용되는 용어인 '외교'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가지는 대외활동"[3]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대외정책은 모든 대외관계를 포함하는 정책의 일반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외교정책은 대외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주로 국가 간의 공식관계를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과 외교정책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대외정책 목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존립을 보장받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얻는 등 자국의 이익추구이다. 그래서 정권수립 초기부터 북한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 우호적인 모든 국가와 친선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남한을 혁명화하여 궁극적으

1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4), p. 362.

2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p. 789; 『정치용어사전』 (평양: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8), p. 179.

3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4), p. 362.

로 한반도를 공산통일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냉전시대에는 한반도의 공산통일이 대외정책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대남혁명을 위한 국제혁명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냉전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구도는 국제혁명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 친선동맹국인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제 3세계의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를 비롯한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되었고,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이 발생하자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남정책보다 순위가 높아진다. 북한의 대외정책이 체제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위상이 변한 것이다. 달라진 국제환경에 따라 대외정책 기조도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4]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대외정책은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변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대외정책의 목표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자신의 통치력 강화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초기에는 대내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대외관계에 몰두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적 목표인 핵무력 강화의 수순으로 몇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과거보다 더 강력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달라진 주변환경에 따라 대외전략의 기조가 강경과 온건의 '롤러코스트식'으로 급변하기도 했다. 최근에

4 이수석, "대외정책의 결정과정과 전개," 박호성 외,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p. 342.

는 '남매정치', '남매의 대외정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김여정은 강경발언, 김정은은 온건발언이라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대외정책의 구사로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선언하고, 핵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군사 분야의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의 대외정책의 연속선에서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대외 군사협력 관계는 대외관계의 일부분이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북한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속에서 대외관계가 진행된다면, 군사협력 관계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제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 안보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은 군사적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생존 능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 중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은 북한의 대외관계사에서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정책 중에서 대중국, 대러시아와 관련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와 관련된 연구는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진척되지 못했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분야 연구는 거의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된 환경에 따라 시대별로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군사협력의 목표와 양태가 달라졌다. 김일성 시대에

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에 군사병력과 군사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북한은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일 국교수립을 통해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연계해서 경제발전과 체제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서, 제 3세계와의 사회주의 연대의식의 강화를 통해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체제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국가들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친선외교정책을 전개했다. 군사협력도 이런 기조에 따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대외 군사협력을 전개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 연대 외에도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사기술력의 함양과 핵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강국의 목표를 세웠다. 이런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외부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군사협력 중에는 핵관련 기술과 인적 교류가 많았다. 핵무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외 군사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통해 체제위기를 해소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감시를 피하면서 비밀리에 군사협력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북제재로 인해 잘 포착되지 않는 거래를 선호해서, 군사무기 거래를 포함하여 각종 대외 군사관련 활동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대외관계, 외교정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인 군사협력분야를 다루려 한다. 김정은 시대 군사 분야의 특징들을 포함해

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와의 군사협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북한이 과거와 다른 군사 협력관계를 구축했는지 혹은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분석 연구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 발생했던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대표적인 전통 친선 우방국가의 관계보다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비밀거래를 포함하여 활발했던 대외군사 교류의 대상이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제 3세계와의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김일성·김정일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특징

1. 김일성 시대
2. 김정일 시대

1. 김일성 시대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의식 강화였다. 물론 사회주의 연대의식과 외화획득 모두 국가적 목표이긴 하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핵심적인 목표와 차순위 목표가 달라졌을 뿐이다. 김일성 시대는 대외관계에서 사회주의 연대의식이 더 큰 핵심 목표였고 외화획득이 부차적인 목표였다.

김일성 시대에는 대남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한반도 적화통일도 주요한 외교목표였으며 이에 따라 외교 협력활동이 강화되었다. 즉, 김일성 시대에는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외교적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미주의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시도했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체제수호와 정권보위를 위해 대외 군사협력을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했다. 더구나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경제질서에 편입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늘 북한체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4대 군사노선, 국방경제 병진노선 등 군사국가화를 추구하여 북한체제를 총동원체제로 만들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및 교류를 강화시켰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외군사 관계에서 중요한 국가는 중국과 소련이었다. 2차대전 이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군을 물리치고 대륙을 장악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도와준 나라가 북한이다.

중국은 북한 김일성 정권의 군사물자 지원과 일부 병력을 포함한 각종 병참지원이 없었더라면 국민당군에게 승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동지적 혈맹관계였으며, 6.25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배경이 된다.[5] 따라서 6.25전쟁 때 중국 역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압록강 인근 중국국경 지역에 까지 접근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항미원조'라는 미명하에 북한도 돕고 자국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하면서 북한군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런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으로 김일성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된 군사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1958년 중국군대가 북한에서 철수한 지 3년 만인 1961년 7월 북한과 중국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6] 그 이후 중국의 문화혁명, 미중수교, 한중수교 등으로 몇 번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형성했으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동맹관계에 비해 지난 몇십년간 북중 간의 군사협력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북한군 내 친중 성향의 인물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오히려 꺼려했던 측면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혈맹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군사 교류측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나마 1970~80년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국의 대북 군수물자와 전투기 등의 지원은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급감했다. 기존의 군장비 소모품과 수리 부

5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서울: 중심, 2000), p. 120.

6 김일성 정권 초반 중국의 대북지원에 관해서는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pp. 220-222 참조.

속품을 주로 지원했으며, 최고위급 군사교류도 소원해졌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북중동맹 관계를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핵개발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도, 지배하지도 못하는 수준 정도의 군사협력을 전개했다.

북소 군사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정권수립 초반부터 중국보다는 소련으로부터 최신 군사무기와 기술을 지원받았다. 1961년에 북한은 소련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동맹조약까지 체결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시절인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소련으로부터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 헬기를 포함해서 약 200여대 이상의 공중전력 지원과 1,100여대 이상의 장갑차와 전차를 포함한 지상무기, 4척의 잠수함을 제공받았다. 고르바초프 시기인 1980년대 중반에는 최신형 전투기를 비롯해서 상당한 양의 공군 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은 소련에 공군과 해군기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붕괴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군사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김정일 시대인 2000년 푸틴집권 이후 북러 간에 외교관계가 개선되면서 군사교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 활발했던 중국과 소련과의 군사협력이 1990년대부터 소원해지면서 북한은 무기거래 및 군사 기술교류를 위해 다른 시장과 경로를 찾아야만 했다. 물론 이전부터 북한은 새로운 군수시장을 확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사회주의 연대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남북한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아울러 무기거래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오래전부터 교류해왔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무기거래, 군사기술 교환, 용병파견 등이 있었다.

소련의 붕괴로 북한은 새로운 대외군사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시대였던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수 산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었다. 당시에는 진영외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군비경쟁을 벌이고, 자국의 무기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던 시기였다. 북한은 다른 제 3세계 국가들과의 무기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다른 국가들의 주요 무기들을 수입해서, '북한제'로 국산화시켜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해외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군사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북한의 군사기술은 김일성 시대에 큰 발전을 이룩했다.

북한은 중동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에서 각각 차별성을 갖고 있다. 시리아, 이란 등의 중동국가들과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전략무기 거래를 통해 고도의 정밀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무기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과 미사일 발사 실험비용을 절약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원유를 제공받거나 외화를 벌어들였다.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은 중동지역에서는 각종 전쟁에 참전 혹은 비공식 개입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반미전선에 가담토록 했으며,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통해 기술협력과 외화벌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협력은 원조를 통한 상호연대의 성격을 띠었다. 북한정권은 아프리카 지역 내 많은 국가들과 군사조약을 체결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고 있었던 식민국가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게릴라 세력을 훈련시켜 반미운동과 활동에 앞장서게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반제국주의 전선에 앞장서고 있던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있게끔 유도했다. 즉, 무기거래와 개발을 통해 중동국가들과 군사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은 주로 원조의 성격을 지니면서 이념적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7]

그러나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외군사교류를 통해 발전해온 군수산업은 탈냉전 이후 점차 위상이 하락하였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의 군수물자 수입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체 수입액 중에서 평균 20~30% 수준이었으나 탈냉전 시대에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군수물자 수입이 10% 이하로 하락했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냉전 당시의 15~20% 수준에서 탈냉전 시대인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5% 이하로 하락했다.[8]

7 김일성 시대 및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정책에 관해서는 김국신, "북한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정책," 양성철·강성학 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프레스, 1995)을 참조.

8 서주석, "북한의 산업 : 군수산업,"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2. 7. 8), p. 34.

2.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에는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경제난 극복과 체제유지가 외교 목적이 되었다. 한국이 기존의 동구 공산주의권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자, 북한은 실리외교를 강화하여 경제난에서 탈피하고 체제붕괴를 막고자 노력하는 시기였다. 외교목표로 경제난 극복과 체제생존 등 대내요인이 강조되면서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외화 획득에 주력하게 된다. 2000년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북한은 해외지역 대상으로 군사협력과 외화벌이 사업을 훨씬 강화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병력과 훈련제공을 통해 반제국주의·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주력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전략무기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핵심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시리아, 이란 등의 국가들과 탄도미사일, 핵관련 기술,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거래를 통해 상호간에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무기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발사비용을 절약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군사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받거나 외화를 획득해서 경제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9]

9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원지우, “북한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외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을 참조.

김정일 시대에 들어 거래하는 무기의 종류가 다양화, 고도화되어 김일성 시대보다는 무기의 수준이 훨씬 정밀해졌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추었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들의 숫자도 많아졌으며,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군사적으로 상호 필요한 분야에서의 교환거래가 자주 발생해서, 예컨대 북한은 시리아에 미사일 생산기술을 수출하고 자신들이 보유하지 못한 첨단기술을 제공받았다. 또한 불법 군사거래 자금의 흐름을 가급적 축소하여 금융망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전략을 취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들을 많이 구비하게 됨에 따라 북한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대량살상무기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 각지로 팔려나갔다. 1990년대 북한은 박격포, 고사포, AK소총, 방사포 등을 동남아 국가에 판매했으며 잠수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 등에 다수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미사일 수출 중단 압박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대신에 장갑차, 탄약, 군복, 대전차포,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르완다, 자이르, 콩고, 에티오피아, 미얀마, 예멘 등으로 수출입 국가들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시대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무기시스템, 예비부품, 수리 및 조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10]

1999년부터 김정일 정권 후반기인 2008년까지 약 10년간 북한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에티오피아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거나 군사훈련을 지원해왔으며, 그 군사거래로 벌어들인 금액이

10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 North Korea’s Military Customers in Sanctions Era, (UK : RUSI, 2020), p. 35.

막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11]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냉전시절부터 사용해 온 소련제 무기가 필요한데, 북한이 그런 무기 공급원 역할을 해온 것이다.

북한은 노후된 탱크와 전투기 등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국가에 낡고 저렴한 재래식 무기를 팔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군사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료와 첨단 부속품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의 물자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탱크,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첨단 부속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지원 급감으로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무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렇게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고성능 무기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12] 이와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무기 구매가 북한내부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사무기는 현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북한이 핵 개발과 첨단무기 구입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려 보니, 북한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1 "북한, 10년간 5억달러 무기수입," 『Voice of America』, 2011. 4. 12.

12 Ibid.

III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변화 과정과 요인

1. 대외 군사정책의 결정기구 및 과정
2. 대외환경의 변화
3. 변화 요인

1. 대외군사정책의 결정기구 및 과정

1) 기구

북한 헌법은 노동당이 국가의 상위에서 지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수령인 김일성의 교시도 노동당이 실질적 권력기관임을 언급한다. 대외정책도 사실상 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김일성 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기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며, 당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는 정무원, 외교부를 비롯한 모든 대외기관들의 당 생활 및 사상사업을 지도했다.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와 국제부가 책임지고 당적 지도를 했다. 국제부는 당 대회에서 결정된 대외노선에 입각하여 모든 대외활동 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한편, 대외정책과 관련된 기구 내에서 이를 작성, 심의하고 담당 비서를 통해 정치국과 김일성 부자에게 상정했다. 김일성 부자가 승인하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대회에서 채택되고, 형식상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김정일은 아래에서 올라온 제의서를 보고 비준하여 내려 보내면 제의서에 언급된 모든 과업들은 연간 대외정책으로 정식화되며 무조건 관철해야 하는 법으로 간주했다. 연중 《대외활동과 관련한 제의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대외정책에서 제기되는 돌발적인 중대사건들, 시기를 다투는 긴급한 문제들, 외교정책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정세자료들은 보고절차에 따라 김정일에게 수시

로 보고되었다.[13]

김정은 시대에도 대외정책의 결정은 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외무성, 국제부 등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무성은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서 주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수립된 외무성과 지도자의 직접적인 정책보고 및 결정체계가 그대로 작동하며 외무성은 현재 북한 대외정책의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외무성은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정부급 및 비정부급 외교정책을 작성하여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비수교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도 수립하며 김정은의 결재에 따라 대외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결재에 따라 활동하는 노동당 국제부를 비롯한 특수 기관들의 업무에 대해 외무성이 장악·통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외무성은 내각총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수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는 다른 나라 공산당 등 좌익정당들과 기타 집권당 및 야당들과의 대외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당 대 당의 대외사업을 주관한다. 당 국제부는 1950년대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서로서 외무성의 정책결정과 간부사업 등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199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외무성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여 대외활동을 전개하는 체계가 구축되면서 외무성에 대한 지도 및 감독기능을 상실했다.

당 국제부는 다른 나라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의 외교활동은 전개할 수 없으나 공산당들과 집권당, 야당 등 다른 나라 당들과의 대외관계 업무

13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탈북민 김00 증언 (2016년).

를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며 해당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의 대외관계에서는 노동당 국제부가 주요 지위를 차지하며 북중 관계와 관련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 국제부는 산하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의 각종 비정부급 기구들과 단체들, 친북조직들과 인사들과의 교류 등의 현안문제들을 관리하고 북한에 대한 지지자, 동조자 세력 확대와 국제사회의 친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도 전담한다.[14]

김정은 시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체제수호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대부분 대내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요인과 관련하여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도 한다. 즉,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과 관련하여 대미 외교차원의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이 제기되는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혹은 합동회의를 주최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외무성을 비롯한 외교정책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합동협의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등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관여한다.

당 정치국은 노동당의 주요 정책을 협의 및 결정하는 지도기관으로서 대부분 대내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국 관계에 한하여 대외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국 확대회의의 경우에는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의 관계자들도 참석시켜 대외정책 결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4 김동수,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 98.

2) 결정과정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김정은의 단독 결정과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주요 관계자들의 협의결정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외무성과 당 국제부에서 보고하는 대외정책 제의서들을 검토하여 간단한 정책들을 단독 결정한다. 과거 김정일이 해오던 대외정책 결정의 방식과 유사하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의 집체적인 회의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외무성과 당 국제부는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김정은에게 FAX 혹은 전화로 보고하면서 '대책적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발전, 국제기구들과의 협조 등 대부분의 대외정책 이슈들은 김정은이 단독으로 결심하여 비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15]

김정은은 외무성과 당 국제부에서 보고하는 대외정책 제의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독 결심이 어려운 복잡한 대외정책 이슈들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체적 협의체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의 핵 및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국제적 파급영향이 예상되는 중대하고 복잡한 대외정책 이슈들이 제기되면, 당 및 국가 협의회를 조직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특히 김정은 시대 대외군사관계의 외교방향은 경제(비밀)외교 가동 및 제 3세계 외교 확대가 특징이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경제(비밀)외교의 가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각 국들과 경제외교를 가동하는 와중에 대외 군사협력 관계를 확장시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생존을 위해서, 특히 제 3세계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내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및 공식, 비공식 외화벌이 사업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현대화시키려는 김정은 정권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기거래 커넥션 비밀외교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현재도 이런 방향으로 대외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대외 군사협력은 당 군수공업부와 인민무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동당의 인사 변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장 리병철이다. 리병철은 7기 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상무위원에, 당 군사위원회 4차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초고속 승진했다. 이전에는 군사 분야 실세는 군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이었으나, 군수공업부장인 리병철이 상무위원과 당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리병철의 부상은 전략무기 개발의 중요성과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향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개발에 몰두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김정은 정권은 군수공업부 중심으로 무기개발과 거래, 판매 등을 진행하고, 인민무력성을 중심으로는 군사파견 등 인력동원에 나서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외군사협력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5 김동수,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pp. 109-110.

2. 대외환경의 변화

〈표 1〉 북한의 시기별 대외정책 특징[16]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대외정책 목표	한반도 적화통일 국제혁명역량 강화	경제난 극복과 체제유지	3대세습체제 생존 핵보유국 위상 북미관계 개선
대외협력 강화 수단	외교 협력 군사협력	핵무력강화 외화벌이 군사협력	핵무력강화 외화벌이 외교협력

1)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은 1948년 북한정권 수립 때부터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전통 사회주의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이 긴밀해졌고, 남북한 긴장관계가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군사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 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체제생존이 대외관계의 주된 목적이었다. 핵개발 과정에서는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16 이 표는 필자의 전략연구 보고서(2016)에서 인용, 수정·보완 했음.

김일성 시대 초반에는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대외정책보다는 사회주의 진영 편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외교정책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북한은 중소 양국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한 실리를 추구한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동서냉전의 진영외교에 따른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김일성 시대 중반에는 중소분쟁, 제 3세계권의 등장으로 인한 비동맹운동 활성화가 특징이었으며, 미중 데탕트 시대가 도래할 때에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남조선 해방과 국제혁명 역량 강화라는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를 추구했다. 김일성 시대 후반에는 미소 신냉전주의 등장과 이후 냉전시대의 붕괴로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고, 민주화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이 안주했던 국제질서가 붕괴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생존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 지도부는 당시 다변화되는 국제정세를 맞아 흔들리는 북한체제를 지키고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당시 국제정세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로 미중간의 협력 구도가 조성되던 시기였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국제사회 진출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자제했다. 북한도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은 소원해진 전통우방국과의 관계복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거 냉전시대 진영외교의 틀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1994

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에 대화국면이 조성되자,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상화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대에 이르러 북중, 북러관계는 199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가까워졌다. 이 시기부터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주요한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정립되었다. 1990년대 김정일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미북간 대화의 매개로 자리잡게 되었다.

2) 김정은 시대

〈표 2〉 국제환경

국제환경	
김일성 시대	① 초반에는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진영외교 활발 ② 중반에는 중소분쟁, 제 3세계권의 등장으로 인한 비동맹운동 활성화, 미중데탕트 시대 도래 ③ 후반에는 80년대 미소 신냉전주의 등장
김정일 시대	① 탈냉전시대 도래로 북한이 안주했던 국제질서가 붕괴 ② 다변화되는 국제정세로 각 국은 실리외교를 추구 ③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중간의 협력 구도 조성
김정은 시대	①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② 미중 패권경쟁 ③ 북중관계 변화 ④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 ⑤ 북한의 핵보유 ⑥ 북한 인권문제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도전 직면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대외환경은 크게 변화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이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로 수세에 봉착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국면에 처함에 따라 체제생존이라는 대내요인이 외교목적의 근간이 되었다. 전통 친선 국가들을 포함해서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협력을 재모색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들과 고위급 외교를 재개했으며 북한인력의 해외파견, 위조지폐, 마약 등 불법 거래를 통한 외화벌이 활동이 강화되었다. 또한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강경한 대외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 대외환경의 변화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북핵문제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강의 국제적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 정부까지 가세한 새로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금융, 선박, 자원수출 등이 직접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북한 경제난은 훨씬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과 오랫동안 군사·경제협력을 유지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은 아프리카의 전통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정부가 북핵과 북한 인권유린문제를 언급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데 이어 2016년에는 우간다와 에티오피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독일정부는 2016년 초에 불법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북한 외교관 두 명을 추방한데 이어 독일주재 북한대사 내정자에 대해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 동의를 하지 않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한편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해지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대북제재로 인해 개인과 기관의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활동반경이 점차 축소되었다. 또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외화 축적이 곤란해지면서 북한체제는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사치품을 비롯한 물자 수입의 중단 및 축소로 인해 간부들이 생활에서의 불편을 느끼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동시에 체제에 대한 불안감도 발생하고 있다.[17] 대북제재 대상의 확대로 해외거래 은행,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제약되고 있는 형국이다. 외화벌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간부들은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다. 권력엘리트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의 신변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체제 불안정성은 높아진다. 김정은은 외부보다는 북한내부로부터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고립은 내부불만을 초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미중 패권경쟁이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촉발된 미중 패권경쟁은 계속 갈등상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전면전에 이어 외교와 국방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독자적인 경제제재만으로는 중국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당 기간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국제사회 내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과거의 미소 냉전보다 더 치열한 새로운 냉전이 우려된다. 미소 냉전은 군사적인 냉전이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현재 미중갈등은 과거 냉전과 차원이 달라져서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17 이수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대응 전망," 『안보현안분석』 vol. 117 (서울 :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3. 30), pp. 1-2.

탈냉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미중 신냉전은 북한의 대외환경을 변모시켜 미중 양국가는 북핵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미중 갈등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점차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수록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중국의 호응인데, 중국 역시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에 가급적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려고 한다.

셋째, 북중관계의 변화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묵인으로 북중국경에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겨우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와 원자재들이 북중 간에 오고 가면서 북한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이라고 판단한 북한 정권은 비핵화 전략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지원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중 일부 무역거래의 묵인으로 북한경제는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기에 향후에도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체제 내구력이 저하되어 주민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힘겨루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후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인식이나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지원을 동시에 병행해왔는데, 그 비중이 점차 제재 쪽으로 높아졌다. 더구나 북한을 동북아 평화와 중국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중국내 여론 주도층에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을 동맹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청화대 옌쉐퉁 교수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중국과 북한 관계는 한국전쟁을 치를 당시에는 동맹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북한이 군사문제에 관해 의논을 하지 않는 등 동맹국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한이 사실상 동맹을 파기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18]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후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서 긴밀한 북중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의도와 전략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과거 한중수교로 북중관계를 훼손했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여전히 자행되었다고 판단한다.

넷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관계 진전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 적대국가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던 양 국가의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북미간에 새로운 관계개선을 명문화시켰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양 정상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회담이었다

18 "엔쉔퉁 인터뷰," 『조선일보』, 2015. 5. 22.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북미접촉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회담이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미국과 새로운 정상적인 국가관계 수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과거 미중수교 만큼이나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국제질서로 끌어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북한도 미국을 매개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전후, 중국을 4차례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협의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다섯째는 북한의 핵무력 보유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위상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렵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북제재 내용에서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른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와 북한 지도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화보다는 직접적인 군사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헐값에 내다 팔고 싶지는 않고, 많은 보상을 받는 비핵화 방안을 원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려는 글로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와 능력을 과시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 전략의 목표는 '완전

한 비핵화'보다는 '단계적·부분적 비핵화' 추진이다.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과 다르다.

여섯째, 북한 인권문제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적 도전의 직면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국제적 대북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 6일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리고 미국 입국금지 등의 직접 제재를 실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오직 인권침해만으로 제 3국의 최고지도자에게 제재를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사회도 북한에서의 인권유린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의 처벌을 추진하기도 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인권유린 혐의로 국제적 제재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제재라는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있다.[19]

이렇게 과거에 비해 북한이 처한 대외환경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군사 협력 실태도 달라졌다. 즉, 국제사회의 제재로 공개적인 군사협력이 불가능하므로 불법, 위장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며, 군사교관을 파견하거나 무기를 판매하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군사기술 로열티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19 김동수,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p. 22.

3. 변화 요인

〈표 3〉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변화요인

	정치적	기술적	가격경쟁력
변화 요인	① 국제적 고립 탈피 ② 군사력 향상	① 북한의 다양한 무기시스템 ② 북한 무기의 성능 우수 ③ 무기시장내 경쟁국 소멸 ④ 무기판매후 AS 가능 ⑤ 군사훈련 서비스 제공 ⑥ 무기중개조달 서비스 제공	① 저렴한 무기가격 ②저렴한 군사훈련 서비스 비용

1) 정치적 요인

일반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무기 판매로 큰 돈을 벌면서 본격적으로 불법적인 무기판매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본다. 1980년대에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수출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 각자가 국제 무기 판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했었던 시기였으므로, 군사무기 지원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수출 활동이 국제사회의 의심과 우려를 낳은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핵 개발에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국제사회가 우려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거

래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항공기, 장갑차, 전투함, 헬기, 미사일 등의 무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걸 금지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과거처럼 군사무기를 수출하는데 장애물이 많아졌지만, 불법 무기거래와 군사인력 파견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2012년 북한 군사장비 수출 실태' 문건에서 집계한 북한의 2012년 한 해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약 3526억5000만 원)이다. 2011년 수출액 2억5000만 달러보다 20% 넘게 확대된 이 통계는 당시 북한의 무기 수출 네트워크가 꾸준히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0]

북핵 실험 이후에는 핵보유국의 위상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가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는 비밀성을 더 띠기 시작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밀 군사거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비밀거래는 북한뿐만 아니라 거래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무기엠바고라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북한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국가들은 북한의 단골고객이었다.[21] 이들은 무기거래도 중요하나 정치적으로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북한과 군사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자신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이 그 국가나 비국가단체들

20 황일도, "2012년 북한 군사장비 수출 실태," 『신동아』, 2013년 2월호.

21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4.

의 내부결속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꾸준히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정치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자체 무기능력 향상에 관심이 많고 무기수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었으나,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재래식 무기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이 무기개발에 투자되거나 관련 기구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어 군사무기 수출에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10년간의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이런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수국가들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으며, UN 회원국의 50퍼센트는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제출된 보고서에도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22]

이렇게 북한의 무기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 북한이 과거부터 제 3세계 국가들과 두터운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하에에서도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숨은 힘은 중동과 아프리카와의 협력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북한이 비동맹 외교를 주창하고 제 3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시에는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외교경쟁이 벌어질 때여서 남북한이 외교공관 개설의 숫자로 대외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였다. 한반도 문제로 유엔에서의 표 대결을 위해 남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사려

22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22.

고 노력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북한은 당시 아프리카 국가의 독재자 동상을 제작해 줄 정도로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김정은 시대 북한은 외화벌이를 통한 자금 확보만큼이나 대외 군사협력을 통해 체제고립을 피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서 국제사회나 기구에서 북한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수교국을 늘리는 데 집중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 수교국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그 댓가로 국교를 맺는 전략을 택할 때가 많았다. 이런 기조가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제 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한편,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2) 기술적 요인

북한제 무기가 국제 무기시장에서 왜 인기가 있는가? 첫째, 북한의 무기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무기엠바고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북한의 수출 품목과 가격, 마케팅 방식의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수출 품목에는 완벽한 무기시스템, 조립식 키트와 예비부품 및 기반제품, 무기설계 기술, 무기제조 라인 및 공장, 무기 수리기술의 향상 서비스, 군사훈련, 중개·조달·배송 서비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군수상품들은 북한 내부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공장들 중 8개의 공장에서 보병무기들이 생산되며, 11개의 공장에서 탄약과 폭발물, 35개의 공장에서 대규모 무기 시스템을 생산한다.[23]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군사무기 수출금지 대상 국가인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 설계방법을 수정하거나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확보하여 국제 무기시장에서 생존을 추구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 관련 홍보책자를 보면 레이저 유도장치를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선상 크루즈미사일은 러시아의 KH-35 크루즈 미사일과 유사하며 러시아로부터 설계허가를 획득했거나, 북한에서 역설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이 설계 생산한 미니건(minigun)을 역설계 생산할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24] 제트기는 국내생산이 불가하여 해외에서 들여와서 약간의 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며, 대북제재 이후에는 노후한 함대를 계속 운항하기 위해 예비부품을 구하려 했으며, 미그21 엔진을 조달하는 정황이 몽골과 쿠바에서 두 차례나 포착되기도 했다.

둘째, 북한 무기는 소형화, 경량화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성능이 높은 편이다. 북한제 다연장로켓발사대(Multiple Rocket Launcher)의 성능을 포함해서 북한의 무기개발 수준과 성능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25]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고장이 적은 이유로 북한산 무기가 인기가 높다. '북한제' 무기는 흔히 전쟁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냉전시기 노후무기들이지만, 오히려 그 점이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각국에서 북한 무기 구매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Ibid., p. 39.

24 Ibid., p. 38.

25 다만 규모가 큰 무기 시스템은 성능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bid., p. 43.

일반적으로 최첨단 전자식 군사 장비는 사막기후와 고열로 자주 고장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인기가 많다. 2차 대전과 냉전 시대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후화된 무기들은 다양한 전쟁터에서 오랜 기간 여러 군대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품질이 보장되어 있다. 무기체계가 전자식처럼 복잡하지 않고 수동식이라 비교적 간단하고, 무기의 내부 구조도 단순해 수리나 재생산도 매우 쉽다.[26] 북한은 많은 국가에서 단종된 재래식 무기의 판매, 재가공, 수리, 주요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셋째, 현재 불법무기 수출을 하는 경쟁국가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제 지구상에서 구소련제 무기를 개보수하여 재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수익성이 없을 뿐 아니라 무기 자체가 오래되어 다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존 무기의 예비부품을 구하거나 수리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무기의 예비 부품 및 군수품 분야에서 매우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북한은 이런 틈새를 공략하여 소련, 중국의 전성기 때 개발된 부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27]

넷째, 북한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들을 현대화시켜 주고 있으며, 수리· 유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설계와 생산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들이 외교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26 이현우, “박물관급으로 노후화됐다는 북한무기, 왜 중동에선 잘 팔릴까?” 『아시아경제』, 2018년 9월 17일.

27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p. 43-44.

소규모 경량 무기를 대상으로 설계·생산기술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북한으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받는 관련분야 직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AS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말했다.[28]

여섯째, 북한은 무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군사무기 작동법과 훈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북한군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짐바브웨, 우간다, 나이지리아, 콩고, 모잠비크, 세이셸에 군사훈련을 제공해왔다. 우간다 무스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최초로 탱크 판매와 함께 탱크군 부대를 훈련시켰다고 증언했으며, 북한 내 김일성 군사아카데미에서 외국 무관을 직접 훈련시키기도 했다. 헤즈볼라와 PLO도 군사훈련을 북한군으로부터 받아왔다. 북한군은 무기체계 작동방법을 훈련시켰으며, 리비아와 마다가스카르에는 미그기 작동법을, 우간다와 콩고에는 탱크 작동법을 전수했다. 나이지리아에는 경호훈련을 제공했다. 짐바브웨에서는 비무장전투 훈련 제공, 정보공작, 정찰, 전투기술 등을 제공했다.[29]

여섯째, 북한이 제공하는 편의 중에 무기중개 조달 서비스도 있어 북한의 단골 군사고객들은 북한의 중개서비스를 잘 이용했다. 스리랑카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스리랑카 반군세력에게 중국제 무기판매를 중개했는데, 북한과 중국회사가 계약을 맺고 제조부터 배송까지 협력하는 것으로 보인다.[30] 북한은 거래국가가 무기생산 공장을 건설할 때부터 기계 및 부품을 조달해줬으며, 해당 기계 및 부품이 없을 경우, 북한이

28 Ibid., p.47.

29 Ibid., p. 48.

30 Ibid., p. 49.

직접 해외로부터 부품을 사서 판매하거나, 무기로 제작해서 공급하기도 했다.

3) 가격경쟁력 요인

북한의 군수품은 가격이 저렴하여 해외국가 무기 수요의 주요 요인이 된다. 냉전시대 무기를 제조, 판매하던 공산진영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으로 자본주의화 되거나 자유진영의 국가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현재 과거의 무기 공급국가들이 비밀리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무기를 제작, 판매할 기술과 자금, 판로가 거의 없다. 오히려 무기제작으로 국가 수입을 높이기보다는 서방진영으로부터 경제투자를 받거나, 경제협력으로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된다.

냉전 해체 이후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무기들을 대량으로 판매해서 현재 국제 무기시장에는 구 소련제 무기들이 많다. 그런데 국제무기 시장에서 구소련의 무기들을 구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그 무기 판매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량하거나 보수해서 국제시장에 내놓는 무기는 대체로 가격이 저렴하여 인기가 높다.[31] 심지어 다른 국가들이 주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조나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북한은 냉전해체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무기를 공급하는 원천이 사라진 후에 일종의 틈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예전의 냉전시대에 자주 사용되던 무기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온 것이다.

31 이현우, "무기로 본 세계 : 북한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아시아경제』, 2020. 5. 3.

북한이 거래하는 무기 품목을 보면, 주로 1960, 70년대의 구소련 무기가 많다.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화기, 잠수함, 탱크, 장갑차, 곡사포, 다연장로켓, 박격포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가 망라돼 있으며, 무기수출 이후 수리부품 및 소모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AK-47 소총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AK-47 소총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북한은 이후 설계를 더욱 단순화하는 개량화 작업을 거친 뒤 상대를 가리지 않고 판매에 열중해왔다.[32] 가격이 매우 저렴한 사례들은 RUSI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콩고공화국에 수출한 B-12 107mm 다연장 박격포의 가격은 대당 1300달러 내외이며, BM-21 120mm 다연장 자주포의 경우 대당 6000달러 안팎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내 민간회사에서 구매한 BM-21의 대당 가격은 3만 달러에 가깝다.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러한 가격 차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군수산업 전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북한 특유의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33]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등 일부 고성능의 무기나 첨단무기들은 높은 가격을 받기도 한다. 탄도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북한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져서,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상태에 있거나 비밀활동을 하는 세력에게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예를 들면, 북한은 리비아에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량살상 군사무기의 상

32 황일도, "평양이 뿌린 AK-47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기까지," 『주간동아』, 1020호 (2016. 1. 6).

33 Ibid.

품을 판매하는데, 이 가격은 시장에서의 보통 가격의 40배에 달한다.[34]

연식이 오래된 냉전시대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예비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군사훈련 서비스가 저렴한 이유는 북한의 인건비가 낮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주의 시스템상 인건비책정이 어렵고 상부에 보고할 때 이익보다는 수입이 더 중요시 되는 분위기 탓도 있다. 즉, 생산비를 포함한 이윤추구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수중에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생산이나 군사훈련 서비스에 제공된 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35]

중동지역에서 북한이 판매하는 무기들은 이 지역의 필수품이 되었다. 예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각 지역의 정부군이나 반군들이 북한제 무기, 예컨대, 권총과 기관총, 수류탄을 들고 상대와 교전하는 전투상황은 일상적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대량으로 북한식 '73식 기관총'을 보유해서 정부군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인 바 있다. 이 기관총은 예맨반군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군사무기였는데,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기관총이 밀거래되었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이런 소형무기 수출로 북한이 매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약 10억 내지 2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소형무기 판매 1위국인 미국이 매년 약 11억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무기밀거래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36]

---

34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56.

35 Ibid., p. 55.

36 이현우, "무기로 본 세계 : 북한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Ⅳ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유형별 특징

1. 무기거래
2. 군사인력 파견 및 훈련
3. 군사기술 교류
4. 무기마케팅 협력

〈표 4〉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유형별 특징

김정은 시대 대외 군사협력의 유형별 특징	
무기거래	① 선대 정권의 무기구입 국가는 여전히 단골고객 ② 새로운 무기구입 국가는 계속 등장 ③ 무기판매의 거점으로 특정국가와 해당 주재 외교관을 활용 ④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거래 ⑤ 무기거래 대가로 물품으로 받는 물물교환 형태가 진행 ⑥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공해상 혹은 다른 지역에서의 우회거래 ⑦ 최신 군사기술의 발달로 북한제 무기 거래의 한계 발생
군사인력 파견	① 전통적인 군사협력 국가에게 여전히 군사인력을 파견 ② 군사인력 파견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 ③ 군사인력 파견 대가로 지하자원을 거래 ④ 군사인력 파견은 북한의 실전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군사기술 교류	① 시리아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군사협력을 지속 ② 이란과 핵기술 협력 진전
무기마케팅	① 군사무기 마케팅은 대표적인 3개의 회사들을 통해 진행 ② 위장 회사와 차명 은행계좌를 사용 ③ 현지 무기판매 브로커를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무기판매 정책을 추진 ④ 당 창건 기념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군사 행진은 불법 무기수출과 연관 ⑤ 불법무기 거래의 최종 창구는 39호실

1. 무기거래

북한의 무기수출 비즈니스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한제 무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는 2015년 현재 북한제 무기의 고객으로 남아 있는 국가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국제사회 제재에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거래를 이

어온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첫 번째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을 간헐적으로 수입하는 예멘과 에티오피아 등이 두 번째 부류이다. 국제제재를 인식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과 노후제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단발성으로 임시변통으로 무기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탄자니아와 콩고공화국이 세 번째에 속한다.[37]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급증한 무장세력이 네 번째 고객군을 이루려 한다.[38]

김정은 시대 무기거래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대 정권부터 진행되어온 무기거래 국가는 김정은 시대에도 변함없이 단골 고객으로 남아있다. 북한과 지속적으로 무기거래를 해 온 대표적인 국가는 시리아이다. 시리아는 북한과 40년 이상 지속된 오랜 군사협력 국가로서, 이런 밀착관계에는 김정은 집안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39] 터키는 2015년에 시리아행으로 추정되는 1400개 북한소총, 3만개의 탄약통, 가스 마스크를 적발했다. 시리아가 유럽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기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무기거래로 정부군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북한은 헬리콥터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까지 함께 파견시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도 시리아와 북한 간에는 고위급회담이 2번이나 열리는 등 상호교류

37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113.

38 황일도, “평양이 뿌린 AK-47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기까지.”

39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68.

가 빈번했으며[40], 북한은 시리아에 무기개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등에 관해 자문했으며 시리아에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무기들은 무기거래시장에서 구소련제 무기나 다른 국가의 무기들을 구매해서 시리아에 보내기도 했다.

2019년 9월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나미비아, 르완다, 시리아, 우간다 등 5개 나라에서 북한과의 불법 군사 협력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이 시리아 브로커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 판매 중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3월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다.[41]냉전이 끝난 후, 북한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 혹은 비국가세력은 축소되는 추세이나 시리아, 우간다, 이란, 콩고, 미얀마, 쿠바는 변함없는 북한 군수산업의 수요자이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의 무기를 구입하려는 새로운 고객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군사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과 거래를 시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테러조직 및 반군들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대했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가 북한제 미사일과 탱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북한의 새로운 고객이자, 시리아와 북한의 무기커넥션을 잘 설명하고 있다. IS의 주력 무기는 BM-11 방사포와 T-55 탱크, SA-16을 복사한 휴대용 지대공

40 Ibid., p. 69.

41 S/2019/691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참고.

미사일(MANPADS)인데, 이 무기들은 IS가 시리아 정부군의 군수공장과 무기창고를 습격하여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42]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IS에 북한이 직접 무기를 판매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주장도 있다. IS 세력의 주축은 사담 후세인 시절 이라크 정규군에서 복무했던 수니파 세력이므로, 이들이 독자 무장세력으로 변신하면서 갖고 나온 북한제 무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레바논에 자리잡은 위장 무역회사를 거점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무기거래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마스는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주문했는데, 미사일을 포함하여 전쟁 발발시에 하마스 소속 전투요원들 간에 사용될 통신기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북한 터널 전문가들이 가자지구에 파견되어 터널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어 하마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다.[43] 예멘의 후티 반군과 북한 간 방위산업에 관한 협력사업과 관련해 2건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군사 장비 담당 부처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시리아 국적의 사업가와 단체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후티 반군에게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무기판매의 거점으로 특정국가와 해당 주재 외교관을 활용하는 방식은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이다. 북한은 이집트를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를 판매해

42 전경웅, "장기간의 시리아 내전 중 얻은 것 추정," 『뉴데일리』, 2014. 12. 6.

43 Con Coughlin, "Hamas and North Korea in secret arms deal," The Telegraph, 2014. 7. 26.

왔다. 2018년 3월 4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이 발표할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44]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단속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가 약 2천600만 달러의 금액에 해당되는 약 3만발의 로켓 수류탄을 싣고 있었다. 이 수류탄을 구매하는 고객은 이집트 내 주요 방위업체인 아랍산업화기구(AOI)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은 북한과 이집트가 은밀한 무기거래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45] 이집트는 이 무기들을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하였다. 특히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관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북한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혹은 반군세력과 무기를 거래하는 중심역할을 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위해 외교관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외화부족으로 북한지도부의 운영자금까지 부족한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려고 외교관들을 불법적인 무기 장사에 활용하려 했다. 유엔과 미국은 2016년 당시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박춘일은 외교관 신분을 악용해 북한의 무기거래 주요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으며, 카이로를 거점으로 활동한 북한 관료 김성철은 2013년 수단에서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46]

44 『New York Times』, 2018. 3. 4.

45 노재현, "북한, 이집트 거점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 『연합뉴스』, 2018. 3. 4.

46 노재현, "북한, 이집트 거점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

이란 대사관 역시 불법무기 거래의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거래를 주관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상주했었는데,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으로 군사무기 거래 관련 북한의 외교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명단에 올린 후에 이란에서 이들이 추방되었다[47] 그러나 2016년 이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물론 또 다른 무기제조 및 수출업체인 청솔이 다시 이란에 돌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 이란이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을 통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들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생필무역회사'는 북한 외교관의 지원하에서 이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는 김학철, 하원모 등 북한인이 이란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현직 이란주재 북한 외교관이 금과 현금 밀수에도 가담한 점을 공표하기도 했다.

넷째,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함으로써 북한의 해외 무기거래의 비도덕성이 드러났다. 시리아는 북한으로부터 많은 화학탄두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내전에서 민간인과 반군 대상으로 각종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2016년부터 북한이 내전에서 사용된 화학무기의 제조에 기여하거나, 직접 제공했다는 정황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48] 2019년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7년까지 북한발 시리아행 선박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비롯해서 최소 40건 이상의 국제사회가 금지한 물품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화학무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시리아간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거래 정황을 잘 나타낸 대목이다. 시리아 정부는 다마스쿠스 근처 반군이 점령한 지역을 공격할 때, 과거 수많은 전쟁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49]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시리아는 밸브, 내산성 타일, 온도 측정기 등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기술자들이 시리아 아드라와 바르제와, 그리고 하마에 있는 미사일 및 화학무기 시설에서 직접 근무하기도 했다.[50]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악성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적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생물무기 금지협약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균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군사적 용도로 정교하게 무기화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화학무기에 이어 생물학 무기도 개발하여 해외로 판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51]

다섯째, 외화벌이를 위해 무기거래 대가로 물품으로 받는 물물교환 형태가 진행되었다. 미국 아일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북한정

47 조은정, 『VOA』, 2019. 10.

48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68.

49 이영태, "미국무부, '북, 화학무기 사용해 안보리 결의 위반'... 대북제재 결의 위반국도 늘어," 『뉴스핌』, 2020. 7. 2.

50 장지영, "북한, 시리아에 화학무기물자 및 미사일 기술자 수출," 『국민일보』, 2018. 2. 28.

51 노석조, "북, 공격적 생물학적 무기 다량 보유," 『조선일보』, 2020. 4. 18.

권은 군사거래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망을 넓혀 북한의 대미 또는 대남정책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52] 그 일환으로 무기거래로 다른 물자나 물품을 받아 외화벌이에 충당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대가로 광산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신코로비(Shinkolobwe)에 있는 우라늄 광산이 북한과 콩고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콩고로서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북한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북한의 무기들을 비밀리에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53] 북한 역시 오랫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콩고지역의 우라늄광산에서 나오는 물질이 필요했다. 콩코 공화국은 인종적 문제로 지역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탈냉전 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외화벌이가 필요했던 북한과 콩고와의 이해관계가 잘 들어맞아 유엔의 대콩고 무기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비밀경로를 통해 콩고와 현물을 주고받으며 무기거래를 해왔다.

여섯째, 북한은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공해상 혹은 다른 지역에서의 우회거래를 통해 무기를 판매했다. 미국이 대북 무역과 관계된 아시아권의 의심 선박 10여 척이 앙골라와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기착한 것을 확인하고 입항 기록을 분석하여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았다. 그 결과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항구에 도착한 북한발주 선박들

52 변창섭, “북, 외화벌이 위해 시리아·이란 접근,” 『자유아시아방송』, 2013. 10. 22.

53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87.

은 현지에 머물러 있다가 감시망을 피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공해상에서 선박 간 이동으로 북한 선박에서 군수물자들을 전달받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혹은 단체, 무장세력에게 건네주기도 했다.[54]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 요원들은 작은 어선이나 소형 관광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입항한 북한 선박에 접근해서 외화를 전달하거나, 외교 행낭을 통해 직접 평양에 송금하기도 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도 무기 거래를 해왔다. 에리트레아 방위군이 운영하는 ‘에리텍 컴퓨터 조립 & 통신기술 회사 (Eritech Computer Assembly & Communication Technology PLC)’가 군사용 통신장비 기업을 가장해 북한의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 둔 유령회사 ‘글로콤(Glocom)’으로부터 군사 무기와 같은 군수물자들을 제공받았다고 한다.[55]

2013년 2월 북한에서 제작한 무기들이 소말리아의 민간 매장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년 7월 14.5mm 중기관총 탄약통도 발견됐다. 이 탄약통은 1977년 리비아와 북한이 맺은 협정에 따라 북한이 리비아에게 판매한 것이었다. 이 북한산 탄약통이 소말리아에서 발견된 것은 소말리아가 직접 리비아로부터 구입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상은 리비아를 거쳐 소말리아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56] 외견상 거래대상은 북한과 리비아이나, 실제로는 북한과 소말리아가 거래당사자로서, 리바아는 중간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8월 터키 정부가 압수한 리비아 국적의 북한 선박에 1천 4백정의 권총과 소총, 3만 발의 탄약, 방독

54 신진우, “북, 제재 그물망 뚫고 중동, 아프리카에 무기광물 밀수출,” 『동아일보』, 2018. 3. 1.

55 지다겸, “북한, 다수 국가와 불법군사협력,” 『VOA』, 2020. 4. 25.

56 이정현, “유엔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불법거래 실태,” 『월간조선』, (2014년 5월호).

면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 선박은 2012년 12월 리비아 무기를 시리아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에 큰 논란이 되었다. 북한제 무기들이 여러 국가를 우회해서 해당 국가로 이동한 사례들이다.

북한의 군사무기 거래가 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에까지 영향을 확대하기도 했다. 북한은 중남미 국가와의 무기거래를 통해 아프리카로 우회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청천강호 불법무기 거래 의혹이 대표적 사례이다. 파나마 정부는 북한 국적의 화물운반선 청천강호를 대서양 연안에서 억류한 후에 불법무기 선적 여부를 조사했다. 청천강 선박에는 25개의 무기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으며, 이 컨테이너에는 두개의 대공 미사일 조립체, 9개의 미사일 부품, 두 대의 미그 21기, 15개의 미그 21 엔진, 5.56mm 카트리지 장착 및 조절 기계, 작고 가벼운 무기탄약, 포병탄약, 57mm 대전차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군수품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2대의 전투기는 언제든지 작전 투입이 가능한 항공기이며, 미그 21 엔진부품은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엔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가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군수물자이다.[57] 당시 쿠바정부는 무기를 개량보수하기 위한 것일 뿐,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보유나 판매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군수품 목들이 신형이었다는 점, 무기들을 포장한 날짜가 최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위반으로 규정했다. 북한과 쿠바는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무기를 거래했으며, 선박에 실린 설탕은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쿠바에 지급된 것이다.[58] 이 무기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가며, 일부 무기들은 중간

57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p. 100-101 참조.

58 이정현, “유엔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불법거래 실태.”

지점에서 배로 환적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로 판매되기도 했다. 북한은 2016년 한해만 약 2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중동의 군사무기 시장에서 유명 인터넷 쇼핑업체인 ‘이베이(ebay)’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59]

일곱째,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무기 거래에는 한계가 있다. 최신 군사기술의 발달은 과거 무기 위주의 북한 군수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무기거래 제한 및 중지조치를 받으면서 새로운 무기 기술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북한 군사제품의 기본 기술은 냉전시기의 기술이며, 기존 설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군사기술의 개발 및 판매, 수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59 이현우, “박물관급으로 노후화됐다는 북한무기, 왜 중동에선 잘 팔릴까?”

2. 군사인력 파견 및 훈련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 인력파견 및 훈련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군사협력 관계인 국가에게는 여전히 군사인력을 파견하고 해당 국가의 군인들을 훈련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로서, 북한이 시리아에 군사인력을 파견하여 내전에 개입한 정황이 김정은 시대에도 드러났다. 2016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시리아 지역 평화회담에서 시리아 반정부군 대표가 시리아 내전에 북한군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우고 있으며, 이들 군병력은 매우 위협적이고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의 군사병력 파견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약 10명의 북한군 장교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여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군사적 요충지인 시리아 북부 알레포지역에서 북한 장교 수십 명이 리비아 정부군과 함께 있는 것이 포착된 것이다. 파견된 북한군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군사전략과 병참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조종사들도 참전하여 공습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60]

둘째, 북한의 군사인력 파견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오랜 기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내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경제지원을 시행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같은 관계는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60 유현민, "북한 공군 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공습 가담," 『연합뉴스』, 2013. 11. 10.

인력파견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간다와의 국방협력이다. 김정은 정권 초반부터 북한과 우간다간의 군사훈련을 위한 인력파견이 실시되었다. 2014년 3월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우간다 경찰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았다. 북한과 우간다와의 인적교류는 오래되어 2007년, 2010년, 2013년 우간다 경찰은 북한 인민보안부로부터 훈련 교관 파견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교관은 약 100명 규모였으며, 한 명당 500달러의 월급을 지급했다. 계약에 따라, 2007년 5500명, 2010년 5500명, 2013년 5700명이 훈련을 받았다. 2008년에는 양 국가의 경찰 간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런 협정에 따라, 북한은 우간다 경찰특공대에 경찰관의 태권도 훈련, 재난대처, 해상 보안 및 안전을 포함한 해상구조 훈련, 공병부대 훈련, 경찰공병단, 범죄법의학수사단 훈련의 기술지원 등을 하는 등 특수부대 수준의 다양한 교육을 시켰다.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했었다.[61] 또한 2013년 6월 17일 북한 인민보안부 리성철 국장과 우간다 내무부 장관은 경찰훈련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년 7월 북한과 우간다 정부는 정식 계약을 맺어 우간다 경찰을 공식적으로 훈련시켰다. 우간다는 북한으로부터 야전단 훈련을 받았고, 훈련에는 AK-47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해양경찰대 훈련에서는 조준사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간다 경찰훈련에는 해양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0년과 2013년도에 6개월간 두 차례나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북

61 이정현, "유엔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불법거래 실태."

한 군인들이 우간다에 상주하면서 400명의 경찰간부단을 훈련시켰다.[62]

2014년 북한은 우간다군내 탱크 부대의 군사훈련과 항공기 조종사 훈련을 제공했다. 그리고 우간다 정규군과 경찰에 각종 무기류를 공급했다. 그 대가로 북한정권의 인권박해 및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었다. 2019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르완다 가비로 캠프에서 북한 군인들이 특수 부대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특수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보고서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우간다에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밝혔다.[63] 이들 노동자들은 우간다에 남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군인신분으로 군사훈련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2016년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고, 2017년 9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결 이후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 우간다 외무부는 북한과 경제 및 군사관계를 단절했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우간다의 나카송골라 공군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북한인 4명을 목격했다고 한다.[64]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군대와 경찰은 큰 차이가 없다. 우간다와의 군사관계는 북한이 군사무기 보다는 주로 군사 훈련을 위한 교관과 인력을 파견하는 원조 방식이라는 점에서

62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83.

63 S/2019/691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참고.

64 이선목, "북-우간다, 군사·경제 협력 계속, 유엔제재 위반," 『조선일보』, 2018. 12. 10.

주목을 받았다.

셋째,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여전히 군사인력을 파견하면서 그 대가로 다양한 군수품을 만들 수 있는 지하자원을 받았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이 쉽사리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65]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큰 외교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다.

유엔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업체를 이용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나미비아와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협약을 맺어 나미비아에 군사학교를 건설해주고, 탄약공장을 포함해서 군수공장 등을 건설해주었다. 2017년에 유엔은 나미비아에 제재조치를 가했으나, 나미비아에는 여전히 북한에서 파견된 군사 고문, 인프라 건설 노동자들이 활보하고 있다.[66] 2013년 8월에는 18명의 북한 기술자가 탄자니아내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면서 F-7 전투기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67] 유엔은 탄자니아 내 므완자 공군기지 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그21 기종을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10여대의 F-7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도 촬영한 공군기지 사진을 2010년도와 비교한 결과, 공군기지의 격납고가 새로 수리되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북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65 박형기, "북한의 숨은 힘, 아프리카," 『뉴스1』, 2017. 7. 11.

66 박정현, "UN의 대북제재에도 북한, 남부아프리카국가들간 관계는 지속," 『KORTA』, 2018. 1. 4.

67 이정현, "북한, 무기수출은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월간조선』, (2015년 4월호).

것으로 파악했다.[68]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탄자니아 정부가 북한 기술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수준은 미약하다.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은 기술자를 초빙하는 것이 유엔의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69]

모잠비크는 북한과의 교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였다. 유엔 보고서는 모잠비크의 마푸토 항구에 정박한 두 척의 배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항구에 정박한 '수잔1'과 '수잔2'를 보유한 기업은 북한과 모잠비크가 합작해 세운 어업 벤처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북한이 모잠비크 군장교의 훈련교육과 일반적인 군사협력 등을 맡아서 추진하는 기업으로써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여러 방식의 불법거래를 맡아서 운영했다. 북한과 모잠비크 간에는 불법적인 인력파견과 같은 군사협력을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었다. 북한 대표와 모잠비크의 군부 지도부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있으며, 2015년 모잠비크 관리들은 북한군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군사무기 수리와 운용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모잠비크군 소식통들은 북한 군인들이 모잠비크내 마푸토 기지에서 약 2년간 군대를 훈련시켰다고 밝혔다.[70]

넷째, 북한의 군사인력 파견은 북한의 실전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군사병력을 포함한 인력을 파견하는 목적에는 사회주의 연대의식 혹은 반미연대의 형성 이외에도 북한군의 실전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등 북한군이 실질적인 전투경험을 쌓을

68 S/2017/150 the Panel of Experts' final report under resolution 2276 참고.

69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135.

70 이승호, "제재 피해 아프리카서 돈버는 북한," 『중앙일보』, 2018. 2. 4.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북한군이 시리아 정부군과 헤즈볼라와 함께 훈련함으로써 정규전과 비정규전 전략을 습득할 수 있으며, 북한이 파견병력과 함께 보유한 무기들을 시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시리아 전쟁터에서 북한이 수출한 소련제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무기 능력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71]

3. 군사기술 교류

북한의 군사기술 교류는 주로 중동국가, 특히 시리아, 이란과 진행되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이집트의 미사일을 북한이 도입하여 개량 미사일로 변환하여 스커드 등 여러 종류의 북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의 군사기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이란과 시리아 등 이들 중동국가에 북한의 기술을 이전하는 협력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고농축 우라늄 핵 관련 기술은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시리아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군사협력을 지속시켰다. 2016년 2월에 미국 의회조사국(U.S Congressional Research)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는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해외국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미국 국방정보국장은 "시

71 Franz-Stefan Gady, "Is North Korea Fighting for Assad in Syria?," The Diplomat, 2016. 3. 24.

리아의 스커드 B, 스커드 C, 스커드 D로 대표되는 액체 추진체 미사일 프로그램"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주로 북한에서 제공받는다"고 발표했으며, "기술적인 향상 및 개발에 있어서는 주로 이란에서 제공받는다"고 주장했다.[72] 2014 IH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단군무역회사 엔지니어들이 다탄두 이동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리아의 스커드 D 미사일 개조연구를 했으며, 북한의 기계 관련 단체가 스커드 금속엔진, 미사일 유도조종 장치, CNC 기계를 시리아 군수 당국에 배송했다고 한다.[73]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장한 2010년 이후에도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전문가를 파견 받았는데, 이란의 미사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알려졌다.[74] 2013년 11월에는 북한과 이란 정부관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함께 지켜보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점증했다.[75] 그 이후에도 북한과 이란은 비밀리에 핵관련 군사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해왔다.

이란과의 군사기술 교류는 북한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류이다. 북한은 이란을 형제국으로 부르면서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

72 Paul K. Kerr · Steven A.Hildreth · Mary Beth D. Nikitin,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2. 26, p.5; Michael Flynn, Director,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urrent and Future Worldwide Threat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April 18, 2013.

73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68.

74 조의준, "핵미사일 중동 전파 막아라," 『조선일보』, 2019. 10. 22.

75 Paul K. Kerr,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p. 7.

지하고 있다. 2012년 9월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 지도부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알렸을 정도이다. 김영남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카메네이(Ali Khamenei)를 만나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으며,[76] 리수용 북한 외무상 일행은 2014년 이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 53차 회의에 참가하여 친선관계를 강화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란과의 우호를 과시했는데, 2018년 8월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전격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면담했다. 2019년 여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 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며[77],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의 불법적인 군사 교류 역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과 P5+1간에 맺었던 핵 딜에도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시킬 근거는 없다. 이란은 핵협상 이후 8년간 핵무기 탑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것을 단지 '요구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에 따라 미사일 관련 제품의 구매는 가능했다.[78] 이란이 북한과 얼마든지 군사기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76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2).

77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9).

78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78.

4. 무기 마케팅 협력

북한의 무기거래 마케팅 방법과 회사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무기구입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무기거래 관리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은 북한의 고위간부, 북한 대외 무역회사의 해외지부, 대사관 직원,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해외국적의 브로커들이 담당했다. 주요한 무기거래의 경우에는 북한과 해당 당사자의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북한의 마케팅 방법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무기 마케팅 회사들은 대표적인 3개의 회사들을 통해 진행한다.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청송연합회사(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의 세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북한 제 1의 무기거래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주요 무기 수출업체로서 북한의 제 2경제위원회 감독을 받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우간다, 나미비아 등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미비아 사무실은 남아프리카 지역의 무기판매 책임을 맡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중동국가와의 거래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79]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했던 '광산개발지도국(Mining Development Guidance Bureau)' 이라는 이름을 2015년부터 '221 총국(221 General Bureau)'으로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80]

조선련봉총회사도 제 2경제위원회 감독 하에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이 회사는 북한의 무기산업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군수품 판매를 지원한다. 청송연합회사는 북한군 산하 정찰총국의 관리를 받으며, 해군기술 및 해군무기 거래가 전문이다. 잠수함, 군함, 미사일 등이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군수물자이며 이란 국적의 회사에 어뢰와 관련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81]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청송연합회사가 북한의 제도권내에 있는 기구이며, 기타 단체들은 이들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 주요 거래 회사 외에 위장 회사와 차명 은행계좌를 사용한다. 북한의 무기 단골 고객들은 냉전종식 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북한은 이들 단골 고객 국가들과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하기도 하며, 무기거래시, 혹은 인력파견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 은행계좌를 활용해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려고 했다.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게 군사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각국의 금융기관과 위장회사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에 차명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 무기거래 전문가인 벡톨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이집트, 모잠비크,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나라에는 실제

79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59.

80 지다겸, "북한 , 다수 국가와 불법군사협력."

81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60.

소유주는 북한 당국이지만 현지인 명의로 돼 있는 위장회사들도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의 유령회사는 최소 100곳에 이르고, 싱가포르에는 최소 12개의 은행에 북한이 개설한 차명계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82]

이전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의 군사거래 중에서 불법적인 미사일 수출 실태가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문건을 인용한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에 외교 전문 속에 등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비밀 거래 실태를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방법은 물론 대금 송금 경로도 자세히 소개했다.[83] 북한은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에 무기를 수출하며 필요한 첨단 기계 및 부품을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를 통해 들여오고, 독일과 홍콩의 금융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주고받는 등 비밀스러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는 타이완, 중국, 일본, 스위스에서 사들였다. 예멘에 수출한 미사일 발사대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예멘 중서부의 항구도시 알후다이다로 들어갔으며, 거래 대금은 독일, 중국, 일본 은행을 통해 오고 갔다고 밝혔다. 이런 비밀거래 유형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비국가세력과도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국가세력은 재정적, 전문성의 문제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연대하에 북한과 우호

82 "벡톨교수의 인터뷰," 『세계일보』, 2018. 11. 15.

83 박중세, "북, 미사일 비밀 수출실태," 『조선일보』, 2010. 12. 8.

관계를 형성했다.[84] 이들 비무장국가들과의 군사거래에서는 위장회사들과 제 3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필요하다.

셋째, 김정은 시대 들어 현지 무기판매 브로커를 내세우는 등 북한은 적극적인 무기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기 수출을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갖가지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임해왔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한은 21세기 들어 재래식 무기시장의 핵심 공급 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양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 브로커를 영입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고, 영문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 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비즈니스에는 각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과 외교 네트워크가 투입됐다. 최근 북한의 제재 회피 실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덴마크 영화감독 마스 브루거에 따르면, 북한이 제작한 무기들을 판매하기 위해 노동당의 관료와 유럽, 중동의 조력자들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240mm 다연장 로켓발사기부터 사거리 1350km 스커드 미사일, 탱크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목록의 카탈로그가 제작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85] 북한은 고객이 군수물자를 구매하기 전에는 해당 국가에서 상품시연을 하지 않으며 모든 상품의 설명은 북한 내에서만 엄격하게 시행된

84 과거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Arafat) 수반은 김일성에게 '팔레스타인 스타상'을 수여하면서 북한의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2014년 7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마스의 군사퍼레이드를 보면, 북한제 대전차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104.

85 김은중, "북, 제재 피해 미사일, 탱크 밀수출," 『조선일보』, 2020. 10. 26.

다.[86]

넷째, 북한의 당 창건 기념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군사 행진이 불법적인 무기 수출과 연관될 수 있다. 북한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해외 국가와 무장단체들은 김일성 광장의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의 신형 무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열병식과 신형무기 공개는 미국을 향한 위협용이기도 하지만, 이들 잠재적 고객을 의식한 일종의 마케팅 활동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개량형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300mm 방사포 등 30종이 넘는 무기 300여 점을 선보인 것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수출을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87]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도 다탄두미사일을 비롯해서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들이 많이 공개되었다. 이런 무기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무기개발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북한무기에 대한 구매의욕을 자극한다.

다섯째, 이런 불법무기 거래의 최종 자금창구는 김정은의 대표적인 자금관리 기구인 39호실이다. 39호실은 북한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작과 대외활동의 자금원이며 합법적인 무역 혹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과거 북한의 중동, 아프리카와의 인적교류 및 파견, 지원, 무기거래를 위해 39호실의 역할은 활발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 활동공간이 이전에 비해서는

86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p. 62.

87 이영종, “평양인사이트,” 『중앙일보』, 2018. 8. 10.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호실은 여전히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금관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군사협력이 축소되면서 그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은 공개성보다는 비공개, 불법적인 측면이 많아져서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는 위장거래가 증가했다. 이는 과거처럼 공개적인 대외 군사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교관 파견도 쉽지 않다. 무기판매 대신 군사기술 로열티를 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래 행태이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되었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와의 비공개적인 무기거래, 인력파견, 군사 기술교류 등 군사협력으로 고립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대북제재 이전보다는 군사협력의 비중과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협력의 생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무기 거래시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냉전 시대부터 거래하던 국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무기 시스템의 일부는 '북한제'로써 이미 북한식의 무기방식에 익숙해 있다. 이들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 북한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해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88].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북한 군사고문단을 초청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저렴해서 북한의 경쟁력을 따라올 국가가 없다. 최근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

88 이정현, "북한, 무기수출은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월간조선』, (2015년 4월호).

으나 성능 좋고 기술력이 뛰어난 북한제 군수무기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산 군사 무기 수출을 차단하려고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제 암시장에서의 무기거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거래한 무기들과 기술, 군사인력이 그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반군을 통한 내전을 부추겨 국제질서를 파괴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국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아프리카는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장기간에 걸쳐 맺은 군사 및 무역 관계를 종식시키고 있다. 이집트,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단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고 나미비아와 우간다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의향을 표명했다. 아프리카에서 북한과 가까웠던 수단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우간다는 북한 군사 자문그룹을 추방했다고 한다. 물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 앙골라가 북한 노동자 150여명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되돌려 보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의 군사 노하우와 무기 지원이 서구의 지원처럼 정치·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미온적인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89]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89 인현우, "북한과 오랜 끈 놓지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한국일보』, 2017. 12. 10.

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의 대북정책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견상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 혹은 군사거래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하고 행동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북한과의 단절이 오래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유지, 강화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북한은 오히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어떤 대중동, 아프리카 정책을 전개하는 가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정책도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은밀한 대외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지는 중요하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거래 및 군사인력 파견, 기술교환 등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외군사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 및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엔 결의에 따라 의무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고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적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의무화된 보고를 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국가들을 지금 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압박해야 한다.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거나, 군사적 협력의 수단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제 3세계 국가의 경우 군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무기를 구입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북한 무기를 구입하게 된다. 즉, 국제적으로

분쟁과 테러가 늘어나면 북한 무기가 더욱 많이 팔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무기거래 전문가인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함으로써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나라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 이후에 대북제재의 강화 여부에 따라 대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포착, 활용해서 북한의 제 3세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중단 혹은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교류, 군사인력 파견 등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런 북한의 대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불법적인 대외 군사협력 관계를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차후에도 국제적 차원, 정부차원,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하나의 문제제기가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 관계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 대해 연구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최근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을 인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글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 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 초보적인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차후 중국, 소련 등 전통 친선국가와의 군사교류 협력 연구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in the Kim Jung Un Era: Focusing on the Third World such as the Middle East and Africa

LEE, Su-Seok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rpose of North Korea's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is to strengthen its ability to survive through cooperation in military fields and to achieve the goals of its foreign polic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that has changed internationally, the goals and patterns of North Korea's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have changed by time. During the Kim Il Sung era, military forces and military training were provided to third world countries such as the Middle East and Africa to form a sense of socialist solidarity and to promote the superior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Kim Jung Il era, the main goal was to earn foreign currency through export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conventional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addition, the goal of military power was set through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Kim Jung Un era, North Korea aims to resolve the crisis and seek its own survival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o this end, it has secretly conducted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and African countries while avoiding surveillance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n this article, Kim Jung Un's era, North Korea's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is focused on the Middle East and African countries. Thus, the actu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in the Kim Jung Un era were examined as follows: arms trade, dispatch, training of military personnel, the exchange of military technology, and the subjects and activities of North Korea's weapons marketing.

Keywords

North Korean military, Middle East, Africa, arms trade, military exercises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강경화. “북한 인력 해외 송출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고영환. “북한외교정책 결정과정 및 과정에 관한 연구-북한의 대중동·아프키가 외교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북한연구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0.

김국신. “북한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정책.” 양성철·강성학 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프레스, 1995

김동수. “북한의 시기별 외교정책 변화 연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박원탁 편저. 『아프리카 지역 정치론』. 서울: 명지출판사, 1989

서주석. “북한의 산업:군수산업.”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2년 7월).

원지우.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은보미. 『“북한의 대 UAE 및 중동 인력송출 현황과 시사점』. KOTRA, 2015.

이수석.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과정과 전개." 박호성 편.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_____.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대응 전망.” 『안보현안분석』 vol. 117 (서울: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서울: 중심, 2000.

임상순. “제3세계·유엔외교의 목표와 전략.”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5.

전동진. “냉전시대 아프리카 공산주의 체제의 형성구조와 소련 및 북한의 영향력.” 「통일전략3(2)」 (서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홍석훈. “김정은 정권의 신대외전략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2호(2015).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4.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정치용어사전』. 평양: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8.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2).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9).

2. 언론기사

김은중. “북, 제재 피해 미사일, 탱크 밀수출.” 『조선일보』. 2020. 10. 26.

노석조. “북, 공격적 생물학적 무기 다량 보유.” 『조선일보』. 2020. 4. 18.

노재현. “북한, 이집트 거점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 『연합뉴스』. 2018. 3. 4.

박정현. “UN의 대북제재에도 북한, 남부아프리카국가들간 관계는 지속.” 『KORTA』. 2018. 1. 4.

박중세. “북, 미사일 비밀 수출실태.” 『조선일보』. 2010. 12. 8.

박형기. “북한의 숨은 힘, 아프리카.” 『뉴스1』. 2017. 7. 11.

변창섭. “북, 외화벌이 위해 시리아·이란 접근.” 『자유아시아방송』. 2013. 10. 22.

신진우. “북, 제재 그물망 뚫고 중동, 아프리카에 무기광물 밀수출.” 『동아일보』. 2018. 3. 1.

유현민. "북한 공군 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공습 가담." 『연합뉴스』. 2013. 11. 10.

이선목. “북-우간다, 군사·경제 협력 계속, 유엔제재 위반.” 『조선일보』. 2018. 12. 10.

이승호. “제재 피해 아프리카서 돈버는 북한.” 『중앙일보』. 2018. 2. 4.

이연철. “북한, 시리아에 불법 무기수출 시도.” 『VOA』. 2012. 5. 18.

이영태. “미국무부, ‘북, 화학무기 사용해 안보리 결의 위반’… 대북제재 결의 위반국도 늘어.” 『뉴스핌』. 2020. 7. 2.

이영종. “평양인사이트.” 『중앙일보』. 2018. 8. 10.

이정현. “유엔이 파악한 북한의 무기불법거래 실태.” 『월간조선』. (2014년 5월호).

_____. “북한, 무기수출은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월간조선』. (2015년 4월호).

이현우. “박물관급으로 노후화됐다는 북한무기, 왜 중동에선 잘 팔릴까?” 『아시아경제』. 2018. 9. 17.

_____. “무기로 본 세계 : 북한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아시아경제』. 2020. 5. 3.

인현우. “북한과 오랜 끈 놓지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한국일보』. 2017. 12. 10.

장지영. “북한, 시리아에 화학무기물자 및 미사일 기술자 수출.” 『국민일보』. 2018. 2. 28.

전경웅. “장기간의 시리아 내전 중 얻은 것 추정.” 『뉴데일리』. 2014. 12. 6.

_____. “북, 시리아 원전 건설 대가로 크루즈 미사일 받아.” 『뉴데일리』. 2015. 2. 16.

조은정. 『VOA』. 2019. 10.

조의준. “핵미사일 중동 전파 막아라.” 『조선일보』. 2019. 10. 22.

지다겸. “북한 , 다수 국가와 불법군사협력.” 『VOA』. 2020. 4. 25.

황일도. “2012년 북한 군사장비 수출 실태.” 『신동아』. (2013년 2월호).

_____. “평양이 뿌린 AK-47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기까지.” 『주간동아』. 2016. 1. 6.

“벡톨교수의 인터뷰.” 『세계일보』. 2018. 11. 15.

“북한, 시리아에 불법 무기수출 시도.” 『VOA』. 2012. 5. 18.

엔쉔퉁 인터뷰. 『조선일보』. 2015. 5. 22.

3. 해외 문헌

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 Entering Syria's Civil War." 38 NORTH, 2013. 11. 25.

Andrea Berger. Target Markets: North Korea's Military Customers in Sanctions Era. RUSI, 2020.

Benjamin R. Young. “How North Korea has been arming Palestinian militants for decades.” NKnews, 2014. 1. 25.

Benjamin R. Young. “How North Korea has been arming Palestinian militants for decades,” NKnews, 2014. 1. 25.

Con Coughlin. “Hamas and North Korea in secret arms deal.” The Telegraph, 2014. 7. 26.

Franz-Stefan Gady. “Is North Korea Fighting for Assad in Syria?.” The Diplomat, 2016. 3. 24.

Michael Flynn.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urrent and Future Worldwide Threat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April 18, 2013.

Paul K. Kerr·Steven A.Hildreth·Mary Beth D. Nikitin.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2. 26.

“Hamas and North Korea in secret arms deal.” The Telegraph, 2014. 7. 26.

“Is North Korea Fighting for Assad in Syria?” The Diplomat, 2016. 3. 24.

"North Korea: Entering Syria's Civil War." 38 NORTH, 2013. 11. 25.

“North Korea’s Chemical Warfare Capabilities.” 38 NORTH, 2013. 10. 10.

“North Korea: Iran's Pathway to a Nuclear Weapon.” THE NATIONAL INTEREST, 2015. 8. 13.

“The hidden North Korea-Iran strategic relationship.” THE WASHINGTON TIMES, 2016. 3. 30.

S/2019/691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S/2017/150 the Panel of Experts’ final report under resolution 2276.

The Asan Institutef for Policy Studies, 2015, APR 0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020/151 Distr.: General 2 March.

INSS 연구보고서 20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의 현황과 특징
: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일 2020년 12월
발행일 2020년 12월
편집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ISBN 979-11-89781-39-2(94340)
979-11-89781-03-3(전18권)
가격 비매품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